

與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심사” 野 “국회 비준 동의해야”

외통위서 트럼프 관세 인상 공방

민주 “국힘, 한국 발목 잡는 것”
국힘 “정부·여당의 반대는 실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품목 관세 25% 재인상 발언 이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미 행정부와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비준 동의는 韓 발목 잡는 것”

이재정 외통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한 현안 질의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부의 스킴(기술)뿐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나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부에서 역할하셨던 의원님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만 외교 로비의 국회 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한미통상협상이) MOU (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문구에서 드러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본다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국내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대응을 위해서 특별법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간사가 미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국가 중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원상복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조 장관은 “관세 25%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은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발의안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발의안까지 총 5건이 발의됐다. 제정법인 것을 고려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野 “국회 비준 동의 왜 안 하나”

외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

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루브(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릴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

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 동의를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다.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주식시장 저평가… 성장 가능성 높다”

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지역·청년·스타트업에 투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에 참석해 “한국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가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3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방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역대 최대”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우 환영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5000을 기록한 데 대해 “전례없는 변동”이라며 “국민도 놀라고 있지만, 예상보다 빨라서 놀랍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리

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한반도 평화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정치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균형잡힌, 제대로 균형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더 보호받고,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진다”며 “청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 한다.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전력 기적이 비싸다고 하는데, 생산 단가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등 정책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본회의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민생 법안 1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 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과 협상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도 현재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로드맵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과 성의있고 진심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스테이블 코인 자본금 50억 이상”

디지털자산TF, 핵심 쟁점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법적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견이 큰 쟁점은 논의될

더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독회에선 ▲법안명 ▲디지털자산업종 설계·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했다.

TF는 추진하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짓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은 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위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도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도 필요해서 협의회에 과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논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